

정책연구
2016-16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전망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상	4
제1절 중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상	4
제2절 미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상	6
제3장 해외 주요 국가들에 대한 수출 추이	9
제1절 중국에 대한 수출 추이	9
제2절 미국에 대한 수출 추이	11
제4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15
제1절 분석 방법 및 데이터	15
제2절 고용총량에 대한 영향	17
1. 대중국 및 미국 수출로 유발된 연간 고용인원	17
2. 수출 감소 시나리오 설정 및 고용총량 감소 전망	20
제3절 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 영향	26
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나타난 임금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 분포	26
2. 수출에 의해 유발된 산업 부문별 고용인원 산정	29
3. 수출에 따른 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 고용인원 산정	41
4. 수출 감소가 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전망	45

제4절 소 결	55
제5장 결 론	59
제1절 분석결과 요약	59
제2절 정책 시사점	62
제3절 맺음말	67
참고문헌	70

표 목 차

<표 4- 1> 대중국 수출에 따른 연간 유발 고용인원	17
<표 4- 2> 대미국 수출에 따른 연간 유발 고용인원	19
<표 4- 3> 미국의 대한민국 반덤핑관세(상계관세 포함) 부과 현황	23
<표 4- 4>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관세(상계관세 포함) 부과 현황	24
<표 4- 5>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고용 총량에 미치는 영향	25
<표 4- 6> 201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직종별 분포	27
<표 4- 7> 201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계층별 분포	27
<표 4-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직종별 분포	28
<표 4- 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근로자 계층별 구성비	29
<표 4-10> 대중국 수출에 따른 연간 상품 부문별 고용인원	31
<표 4-11> 대미국 수출에 따른 연간 상품 부문별 고용인원	34
<표 4-12> 대중국 수출에 따른 연간 산업 부문별 고용인원	37
<표 4-13> 대미국 수출에 따른 연간 산업 부문별 고용인원	39
<표 4-14> 대중국 및 미국 수출로 인한 직종별 고용인원	43
<표 4-15> 대중국 및 미국 수출로 인한 근로자 계층별 고용인원	44
<표 4-16>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직종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중국과 미국 모두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47
<표 4-17>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 계층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중국과 미국 모두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49
<표 4-18>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직종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중국과 미국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51
<표 4-19>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 계층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중국과 미국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52
<표 4-20>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직종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중국과 미국 모두 중간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53
<표 4-21>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 계층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중국과 미국 모두 중간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54
<표 4-22>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56
<표 4-23>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57
<표 4-24>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간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57

그림목차

[그림 3-1] 대중국 수출 추이(1989~2015년)	9
[그림 3-2] 대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2015년 기준)의 2007년 이후 수출 추이	10
[그림 3-3] 대중국 재화특성별 수출 추이(2007~2012년)	11
[그림 3-4] 대미국 수출 추이(1989~2015년)	12
[그림 3-5] 대미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2015년 기준)의 2007년 이후 수출 추이	13
[그림 3-6] 대미국 재화특성별 수출 추이(2007~2012년)	13

요 약

최근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부상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관련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공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부정적 여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능한 한 엄밀하고 심층적인 정량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유의미한 전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더불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닥쳐올 위기를 가능한 한 순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역시 논의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고용총량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 후, 방대한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직종 및 근로자 특성별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초래되는 고용총량의 감소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전제하더라도 4만 3,000명이 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무려 32만 6,000명 이상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수와 대비할 경우, 이는 각각 0.2%와 1.7%에 달하는 숫자이다.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각 시나리오별 전체 감소 전망 고용인원 중 3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1만 3,000명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10만 명 가까이가 해당 직종 일자리에서 실직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의해 여성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 감소 대비 73.3%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3만 1,000명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는 24만 명 가까운 남성 근로자들이 극심한 고용 불안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령대별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그룹인 3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감소 전망 고용인원 중 3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1만 4,000명 가까이,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력별로는 인원 수 기준으로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전체 감소인원 대비 4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2만 명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15만 명이 넘는 정도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분위별로 봤을 때, 임금분위 40~60%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큰 고용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고용 감소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정의상 전체 임금근로자 중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큰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1만 명 가까이에서 많게는 7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저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과 병행하여, 어떤 계층의 근로자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해야 할 단기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가능하다면 되돌리거나 최소한 그 진행 속도를 늦추

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해외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미국 내에서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예 자유무역 기조를 폐기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것보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대응 방안 마련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외교안보 관련 사안과 경제정책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함을 꾸준히 강조해 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편 단기적으로 발생할 노동시장에서의 충격파를 최대한 완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 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대책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직종별 및 근로자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산직종에 종사하는 고졸 이하 남성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의 특성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의해 발생한 비자발적 퇴직자들에 대해 기존의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여파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부문이 나타날 경우, 4개 지역에 개소된 조선업 희망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산업 밀집지역에 전직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희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 전직지원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전직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배규식(2016)이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제안한, 산

업별 노사가 공동으로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여기에 정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네트워크 확대 과정에서 이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뤄 온 우리에게,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분명히 큰 도전이다. 향후 최소 몇 년간 지속될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감으로써,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시스템이 복원될 때 그 과실을 향유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제 1 장 서 론

2016년 12월 현재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정치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여 극심한 내수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요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이 정도로는 아직 충분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는 듯이,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이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의 부상이 그것이다.

2016년 11월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관련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력하게 공언해온 이가, 오랫동안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네트워크 수립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경제 외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은 안보 이익을 침해당할 것임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인은 하고 있으나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원인이 경제적인 것이든 경제 외적인 것이든 간에, 그 부정적 여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단지 향후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원래 경로보다 다소 낮추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즉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감소는 관련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직 위험이라는 결정적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단기에 해당하는 몇 년간에 걸쳐 거시경제지표를 다소 악화시키는 수준에 그칠지 모르나,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능한 한 엄밀하고 심층적으로 정량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유의미한 전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더불어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닥쳐올 위기를 가능한 한 순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역시 논의하고자 한다. 2016년 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사례가 시사하듯,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조만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우선 현재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 배경 지식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및 미국 수출이 어떠한 추세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수행한 정량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고용총량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직종별 및 근로자 계층별 영향 역시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 수행되는 분석의 전제는,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을 대상으로 보호무역장벽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우리의 대외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무역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혀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를 되돌려 자유무역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을 기울이되,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충격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다만 이때 새로운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려 하기보다, 2016년 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대책 등을 참조하여 초점이 어떤 부분에 맞춰져야 하는지 논의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제 2 장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상

제1절 중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상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해외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를 들어 Johnson(1965)은 각국의 산업 경쟁력이 낮을수록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진다는 이론적 예측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예측이 현실에서의 국제무역 패턴과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Lee and Swagel(1997)은 41개 국가에 대한 무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쟁력이 약하거나 쇠퇴하고 있는 산업일수록 관련된 자국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 중 역시 상당 부분은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류 문화콘텐츠에 대한 제한 조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 사안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이미 그 조짐을 보였고, 그 주된 동기는 중국의 자국문화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자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이라는 견해가 있다.¹⁾

1) 이는 본 연구를 위해 개최한 자문회의에 참석한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가 제시한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내려지고 있는 제한 조치들의 목적이, 자국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중국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여 한미 군사동맹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데 대한 반발 및 그 철회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유력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는 한류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홈쇼핑과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의미하는 소위 한한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외 2016년 들어 8월까지 한 건도 없었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가 사드 한반도 배치 발표 이후 갑자기 늘었음을 지적하며, 중국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²⁾

이처럼 중국의 경우 다음 절에서 살펴볼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나라에 대해서보다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 특정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하여 강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힘든데, 비경제적 차원에서의 국가 간 외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상 품목과 강도를 달리해가며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2) 조선일보의 2016년 12월 3일자 기사 『대놓고 압박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참조하라. 해당 기사는 안보 관련 이슈 외에도,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전략 역시 중국의 최근 보호무역 조치 시행에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2절 미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상

미국에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내 러스트 벨트(Rust Belt)라고 불리는, 쇠퇴한 제조업 중심 지역 백인 노동자 계급들의 경제적 박탈감을 보듬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전략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의 주된 목적은 전통적으로 상징되어 온 보호무역주의의 목적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거라는 전망은 투표 결과 개표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직후부터, 트럼프가 내건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본 절에서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그 예측 및 분석 능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상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KOTRA가 2016년 5월에 발간한 보고서는 당시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후보가 내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약이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KOTRA(2016, pp.1-2)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미 체결된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및 징벌적 상계관세 부과,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공약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하게 큰 이익을 취한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물론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트럼프가 내건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약이 전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국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다행스럽게도, 미국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미국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도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하원에 걸쳐 석권하였기 때문이다.

KOTRA(2016)는 이처럼 미국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해 온 의회 내 공화당 주류 세력이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p.7)

다만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호무역 강화 조치가 상당수 있음을 KOTRA(2016)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은 미국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 가능한 무역보복 조치들이다.(p.10) 한편 한미 FTA 등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법률 및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pp.23-24)³⁾

KOTRA(2016)는 미국 대선 6개월 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어느 정도 강도로 나타날 것인지 예측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의 극단적 공약이 모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만약 미국 사회 내에서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지지 성향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할 경우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파고가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pp.25-26)

미국의 경우 중국처럼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비경제적인 이유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외 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잃은 자국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을 따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 국가들에 대해 보호무역 조치를 적용하려는 의도를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이 공조하여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이 진정으로 미국 내 제조업 부문 근로자들을

3) 4장의 정량분석을 위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시나리오 설정에 있어 참조한 최남석(2016)의 시나리오 중, 최상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와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세이프가드 발동' 모두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전망

위하는 최선의 정책이 아님을 미국 정부에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제3장

해외 주요 국가들에 대한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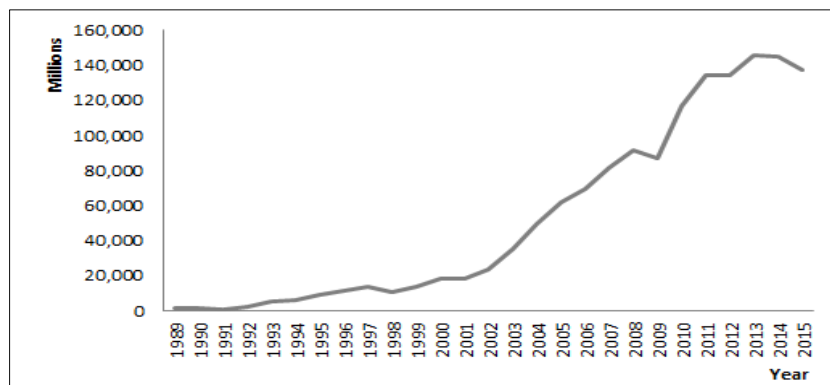
제1절 중국에 대한 수출 추이

단일 국가로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최대 시장은 중국이다. 1989년 이후 중국에 대한 수출액 추이를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은 1989년도에 13억 달러 남짓에 불과했던 대중국 수출 규모가, 2015년도 기준 1,371억 달러 이상으로 26년 사이에 100배가량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 대중국 수출 추이(1989~2015년)

(단위: U.S. 달러)



자료: UN Comtrad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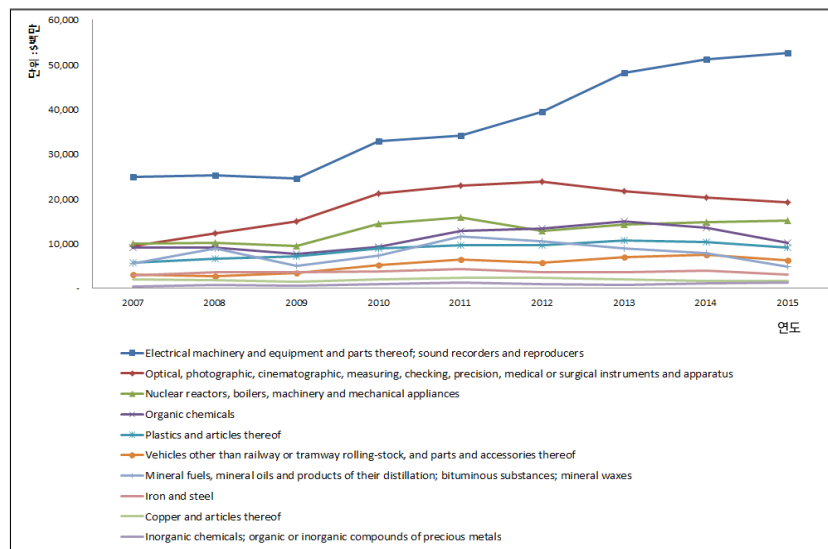
한편 UN Comtrade Database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품목별 중국에 대한 수출 추이를 보면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는 2015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품목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10개에 대해 2007년 이후 수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수출 품목을 구분함에 있어 HS2007 2자릿수 코드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림 3-2]에 따르면 ‘전기 기계, 장치 및 부품류’의 수출액이 가장 높으면서 증가세도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품목의 2007년도 대중국 수출액은 미 달러 기준으로 248억 3,000만 달러였고, 가파른 수출 증가세를 겪으면서 2015년에는 526억 6,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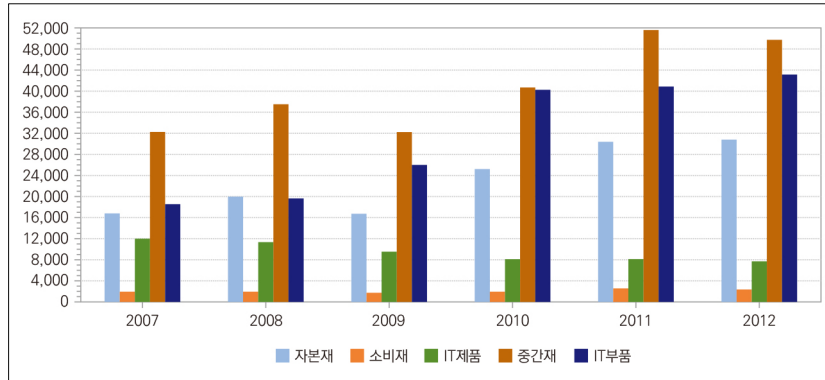
한편 [그림 3-3]은 산업통상자원부의 ISTANS 자료를 활용하여 자본재, 소비재, IT제품, 중간재 및 IT부품 등 5개 재화특성별로 대중국 수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 대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2015년 기준)의 2007년 이후 수출 추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그림 3-3] 대중국 재화특성별 수출 추이(2007~2012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STANS.

[그림 3-3]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대중국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화는 중간재이고, 그 다음으로 IT부품과 자본재가 차례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IT제품과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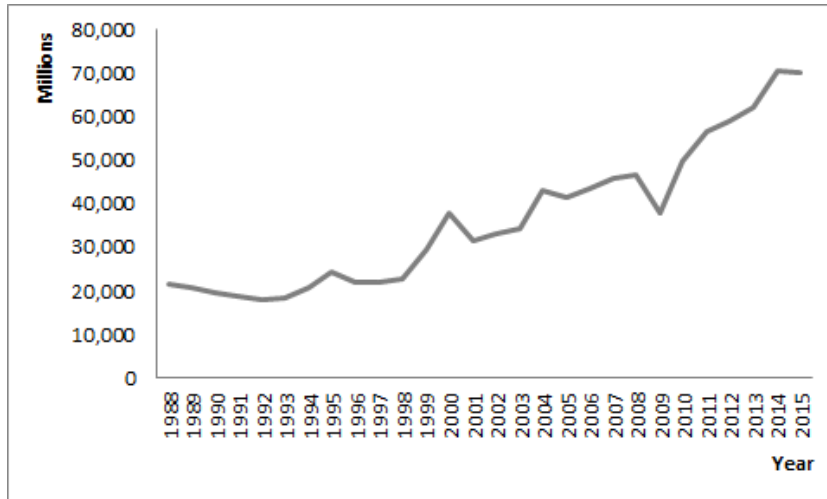
제2절 미국에 대한 수출 추이

중국 다음으로 큰 우리나라의 수출품 시장은 미국이다. [그림 3-4]는 1988년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는 1988년도에 214억 달러 남짓에 불과했던 대미국 수출 규모가, 2015년도 기준 701억 달러 이상으로 27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3-4) 대미국 수출 추이(1989~2015년)

(단위: U.S. 달러)



자료: UN Comtrad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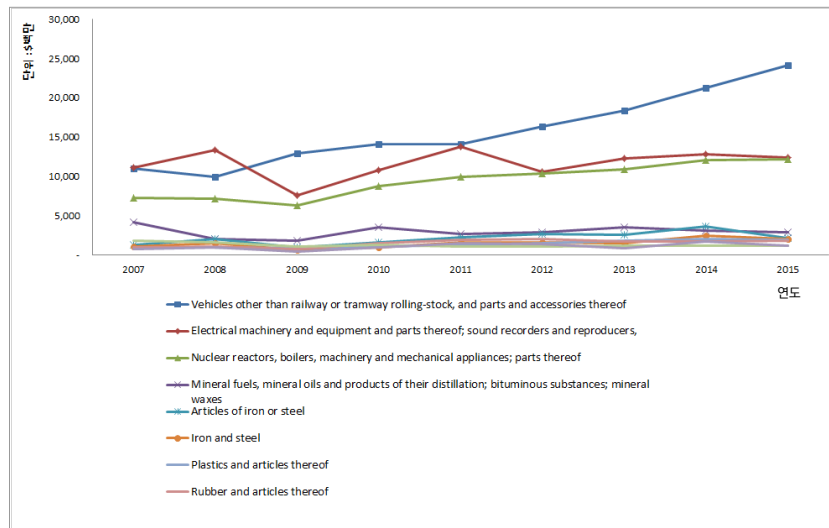
한편 [그림 3-5]는 UN Comtrade Database에 나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3-5]는 2015년 기준으로 대미국 수출 품목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10개에 대해 2007년 이후 수출 추이를 나타낸다. 이때 수출 품목을 구분함에 있어 HS2007 2자릿수 코드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림 3-5]는 대미 수출에 있어 ‘자동차 및 부속품’의 수출액이 현재 가장 높고, 2007년 이후 증가세도 가장 급속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품목의 2007년도 대미국 수출액은 미 달러 기준으로 110억 300만 달러였고, 급속한 수출 증가세를 거쳐 2015년에는 241억 2,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나타내었다.

한편 대중국 수출에 있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기계, 장치 및 부품류’의 경우 2007년에는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도 근소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주요 수출 시장이 중국으로 전환되면서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2007년에 비해 근소하게 증가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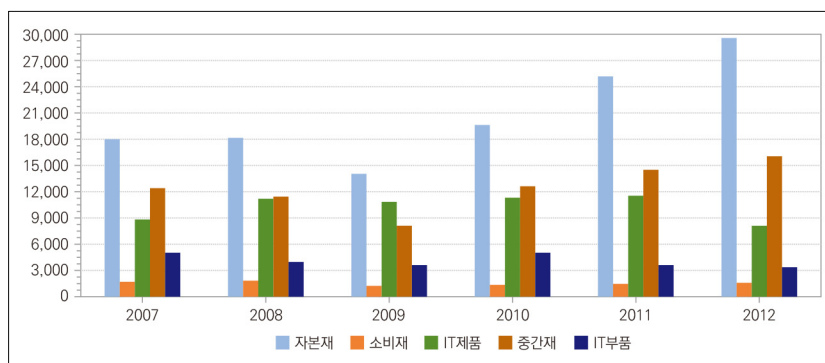
[그림 3-5] 대미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2015년 기준)의 2007년 이후 수출 추이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편 [그림 3-6]은 산업통상자원부의 ISTANS 자료에 나타난 자본재, 소비재, IT제품, 중간재 및 IT부품 등 5개 재화특성별 대미국 수출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3-6] 대미국 재화특성별 수출 추이(2007~2012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STANS.

14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전망

[그림 3-6]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대미국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화는 자본재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중간재와 IT제품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IT부품과 소비재의 대미국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제 4 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본 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의 주된 관심 대상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노동시장 내 고용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더불어 직종별 및 근로자 계층별, 즉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임금수준별로 어떤 직종 및 계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역시 분석할 것이다.

본 장에 제시된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과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어떤 계층의 근로자 위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본 장에 제시된 분석의 핵심 방법론은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에 대한 각 산업별 수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별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고용총량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는 산업연관분석이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 얻어진 방대한 양의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산업별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임금수준별 및 직종별 구성 비율을 도출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연관분석으로 얻어진 고용총량에 대한 영향이 직종별 및 근로자 계층별로는 어떻게 분담되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 역시 제시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두드러질 주요 수출 대상 국가로서 중국과 미국 두 나라를 상정하였다. 이들 국가에 대해 가장 최근인 2015년도 품목별 수출액 자료를 얻기 위해 UN의 Comtrade Database를 활용하였다.

해당 DB로부터 HS2007 코드 6자리까지 세분된 품목별 대중 및 대미 수출액 자료를 받아, 이를 다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⁴⁾

이후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를 2010년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품분류 기본부문 384개 코드에 매칭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⁵⁾ 이를 다시 한국은행(2015, pp.198-204)이 제시한 분류표를 참조하여 산업연관표 상품분류 중분류 82개로 변환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산업연관표 중분류 82개 상품에 대해 2015년도 대중 및 대미 수출액을 집계하였다.

4) 이때 Comtrade Database의 가용한 자료 중 재화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비스의 경우 EBOPS 2002년 분류에 따른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2015년도에 한해서는 11개 대분류 서비스 품목 중 실제 집계에 포함된 품목이 중국의 경우 6개에 불과하고, 미국의 경우는 실제 집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집계가 이루어진 서비스 품목 중에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품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집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분류 품목까지만 되어 있고 중분류, 소분류 단위 수출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재화 수출과는 달리 서비스 수출의 경우 엄밀한 산업연관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HS2007 6자리 품목별 코드를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2010년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품분류 기본부문 코드와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김정호(2016)에서 사용된 연계표 파일을 요청하여 전달받아 활용하였다. 소중한 자료를 흔쾌히 공유해주신 김정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제2절 고용총량에 대한 영향

1. 대중국 및 미국 수출로 유발된 연간 고용인원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중분류 상품에 대한 달러 기준 수출액을 집계한 후, 이를 2015년 7월 1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1,120.5원/달러)로 원화 액수로 변환하였다.

중분류 상품별 원화 수출액이 집계된 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에 게시된 2010 산업연관 실측표 내 2014 연장표에 포함된 부속표 중 통합중분류 고용표에 제시된 상품별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상품별로 유발된 고용인원 및 전체 유발 고용총량을 산정하였다.⁶⁾

그 결과는 <표 4-1>과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⁷⁾

<표 4-1> 대중국 수출에 따른 연간 유발 고용인원

상품 중분류 코드 및 상품명		2015년 수출액 (미국 달러)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고용인원(명)
001	작물	61,005,448	4.2	288
002	축산물	71,222	5.2	0
003	임산물	60,638	4.4	0
004	수산물	16,921,464	4.8	91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63,046	9.4	1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140,727,407	6.0	942
008	식료품	940,100,532	7.6	7999
009	음료품	110,764,790	6.9	855

6) 고용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때, 고용계수로 표현되는 해당 상품 생산에 필요한 고용인원에 더해 여러 상품에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인원을 합한 것이다(한국은행 2015, p.159). 따라서 <표 4-1>과 <표 4-2>를 해석하는 데 있어 특정 상품 수출로부터 유발된 고용인원이 모두 해당 상품 생산에 투입된 인원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7) <표 4-1>과 <표 4-2>에서 HS 코드 '999999', 즉 품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출액(중국 \$6,996,735, 미국 \$10,117,245)은 2015년도 각 나라에 대한 수출액 합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그 액수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극히 작아 분석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표 4-1〉의 계속

상품 중분류 코드 및 상품명		2015년 수출액 (미국 달러)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고용인원(명)
010	담배	9,207,899	4.6	48
011	섬유 및 의복	1,881,726,627	7.8	16,391
012	가죽제품	423,077,907	8.5	4,045
013	목재 및 목제품	6,187,529	8.3	58
014	펄프 및 종이제품	376,122,304	7.2	3,036
015	인쇄 및 목제	38,506	12.6	1
016	석탄 및 석유제품	4,500,515,161	1.4	7,028
017	기초화학물질	12,021,358,754	2.1	28,511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6,936,726,680	3.7	28,779
019	화학섬유	297,803,393	3.8	1,261
020	의약품	205,415,409	6.2	1,426
021	비료 및 농약	92,755,986	4.7	485
022	기타 화학제품	3,349,882,191	5.3	19,864
023	플라스틱제품	2,689,602,155	7.0	21,246
024	고무제품	266,126,799	6.3	1,893
025	유리 및 유리제품	350,458,750	4.9	1,931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312,496,489	7.2	2,531
027	철강1차제품	1,419,429,475	3.5	5,612
028	철강가공제품	1,791,899,051	4.4	8,897
029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2,259,909,677	3.7	9,377
031	금속제품	1,899,265,076	6.4	13,654
032	일반목적용기계	4,647,725,098	7.6	39,574
033	특수목적용기계	6,495,277,263	7.7	55,687
034	전기장비	13,910,953,028	6.7	104,509
035	반도체	26,495,607,637	3.0	89,905
036	전자표시장치	290,438,828	3.0	989
037	기타 전자부품	2,146,853,168	6.5	15,698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3,953,664,291	3.8	16,944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8,274,345,116	3.8	35,299
040	가정용 전기기기	349,734,422	7.9	3,084
041	정밀기기	20,234,369,877	7.0	159,800
042	자동차	6,448,543,418	6.8	49,378
043	선박	451,478,061	6.6	3,323
044	기타 운송장비	51,618,256	5.9	340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914,417,215	10.7	10,946
063	출판서비스	7,333,377	13.9	114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98,488,342	11.0	1,218
079	문화서비스	2,911,214	13.7	45
합계		137,133,478,976		773,103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표 4-2〉 대미국 수출에 따른 연간 유발 고용인원.

상품 중분류 코드 및 상품명		2015년 수출액 (미국 달러)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고용인원(명)
001	작물	60,785,624	4.2	287
002	축산물	428,974	5.2	3
003	임산물	1,534	4.4	0
004	수산물	43,791,843	4.8	235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6,659,179	6.0	45
008	식료품	477,830,091	7.6	4,066
009	음료품	84,967,254	6.9	656
010	담배	91,539,658	4.6	473
011	섬유 및 의복	1,037,727,982	7.8	9,039
012	가죽제품	73,909,857	8.5	707
013	목재 및 목제품	6,644,768	8.3	62
014	펄프 및 종이제품	423,529,322	7.2	3,419
015	인쇄 및 복제	287,726	12.6	4
016	석탄 및 석유제품	2,884,858,446	1.4	4,505
017	기초화학물질	1,302,865,901	2.1	3,090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988,914,118	3.7	4,103
019	화학섬유	304,659,532	3.8	1,291
020	의약품	93,104,024	6.2	646
021	비료 및 농약	22,061,962	4.7	115
022	기타 화학제품	733,470,204	5.3	4,349
023	플라스틱제품	1,177,292,762	7.0	9,300
024	고무제품	1,642,447,810	6.3	11,683
025	유리 및 유리제품	140,286,371	4.9	773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254,062,543	7.2	2,058
027	철강1차제품	2,370,184,766	3.5	9,372
028	철강가공제품	738,362,382	4.4	3,666
029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785,710,064	3.7	3,260
031	금속제품	2,451,027,833	6.4	17,621
032	일반목적용기계	3,965,527,231	7.6	33,765
033	특수목적용기계	3,360,107,510	7.7	28,808
034	전기장비	2,740,721,189	6.7	20,590
035	반도체	1,187,901,915	3.0	4,031
036	전자표시장치	39,474,903	3.0	134
037	기타 전자부품	363,161,768	6.5	2,656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3,348,030,298	3.8	14,349

〈표 4-2〉의 계속

상품 중분류 코드 및 상품명		2015년 수출액 (미국 달러)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고용인원(명)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7,554,289,328	3.8	32,227
040	가정용 전기기기	1,498,615,267	7.9	13,213
041	정밀기기	1,455,771,114	7.0	11,497
042	자동차	23,961,531,497	6.8	183,477
043	선박	629,556,342	6.6	4,634
044	기타 운송장비	993,013,809	5.9	6,533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581,485,744	10.7	6,961
047	가스, 증기 및 온수업	524,630	0.6	0
063	출판서비스	66,727,101	13.9	1,037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68,284,957	11.0	845
079	문화서비스	107,798,066	13.7	1,658
합계		70,119,935,199	461,243	3,419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표 4-1〉과 〈표 4-2〉를 통해 대 중국 및 대미국 수출로 인해 상품별로 유발된 연간 고용인원 및 전체 유발 고용총량 산정 결과를 알 수 있다.

2. 수출 감소 시나리오 설정 및 고용총량 감소 전망

가. 미 국

이제 현재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다면,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총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전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 수출을 얼마나 감소시킬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⁸⁾ 다만 미국

8)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여 관련 시나리오 설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문가들조차 각 시나리오별 수출 감소비율에 대한 예상치를 수립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의 경우 최남석(2016)이 미국의 관세장벽 강화에 따른 수출 감소비율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우 최남석(2016)이 미국의 관세장벽 강화에 따른 수출 감소비율에 대해 설정한 3가지 시나리오를, 비관세장벽까지 포괄할 경우 수출 감소비율이 평균적으로 2배가 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하에 그대로 활용하기로 한다.

즉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7개 산업의 수출 감소액이 연간 18억 달러인 시나리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 경우 7개 산업의 수출 감소액이 연간 81억 달러인 경우,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질 때 8개 산업의 연간 수출 감소액이 32억 7,000만 달러인 경우 등을 고려하였다.⁹⁾

이를 연간 수출 감소비율로 환산하되, 비관세장벽 강화까지 감안한다면 그 비율이 평균적으로 두 배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숫자를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최악 및 최상의 시나리오를 모두 감안하기 위해, 최상의 경우에는 비관세장벽 강화까지 고려하면 관세만 고려할 때에 비해 수출 감소비율이 1.5배가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2.5배가 된다는 가정을 취할 것이다.

최남석(2016)을 참조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고려된 산업의 2015년 수출액을 합산한 뒤 예상되는 수출 감소액의 비중을 구하고 이에 1.5, 2 혹은 2.5를 곱하면, 도출되는 수출 감소비율은 다음과 같다.¹⁰⁾

시나리오 1 (최상): $3.1\% \times 1.5 = 4.65\%$

시나리오 2 (최악): $14.1\% \times 2.5 = 35.25\%$

9) 본 연구에서는 최남석(2016)이 고려한 7~8개 산업이 대중국 및 미국 수출 품목 중 물론 일부만을 포괄하긴 하나, 대표성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 시나리오별 7~8개 산업의 평균 수출 감소비율이 전체 산업에 대해 적용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10) 최남석(2016)의 <표 32>(p.44)에서 7개 산업 연간 수출액 합계는 576억 4,600만 달러이고, 시나리오 1에 따른 연간 수출손실액은 17억 9,770만 달러이다. 따라서 최남석(2016)의 시나리오 1에 따른 수출 감소비율은 3.1%가 된다. 시나리오 2와 3에 대해서도 수출 감소비율을 최남석(2016)의 <표 33>(p.45)과 <표 34>(p.47)를 참조하여 계산하였다.

시나리오 3 (중간): $5.5\% \times 2 = 11\%$

각 시나리오별로 산정된 수출 감소비율 및 <표 4-2>의 결과를 활용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용인원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최상): $46\text{만 } 1,243\text{명} \times 4.65\% = 2\text{만 } 1,448\text{명}$

시나리오 2 (최악): $46\text{만 } 1,243\text{명} \times 35.25\% = 16\text{만 } 2,588\text{명}$

시나리오 3 (중간): $46\text{만 } 1,243\text{명} \times 11\% = 5\text{만 } 737\text{명}$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촉발될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연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단기적으로 최소 2만 1,000명 남짓에서 최대 16만 2,000명 남짓까지 총 고용인원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숫자가 1,962만 7,000명으로 추산됨을 감안하면,¹¹⁾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최소 0.11%에서 최대 0.83%에 해당하는 인원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을 의미한다.

나. 중 국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명확한 시나리오를 설정할 만한 마땅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자국문화중심주의 부상 등의 요인으로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때 나타날 수출 감소 비중이 대체로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의 강도 및 우리나라 전체 수출 품목 중 영향을 받는 품목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미국의 경우에 대해 설정한 시나

11)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리오를 조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2016)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TBT, SPS,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수량제한, 반덤핑 등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건수에 있어 미국이 총 2,797건, 중국이 총 1,675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p.3 그림)

더불어 현대경제연구원(2016)의 분석 결과를 UN Comtrade Database에 나타난 HS 4자릿수 코드 품목별 대미 수출액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15년도 대미 수출액 중 반덤핑관세(상계관세 포함)에 의해 영향을 받는 비율은 4.7%로 나타난다. 반면 유사하게 중국에 대해 그 비율을 산정해보면 2015년도 대중 수출액 중 2.9%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4-3〉~〈표 4-4〉 참조)

〈표 4-3〉 미국의 대한민국 반덤핑관세(상계관세 포함) 부과 현황

HS Code	품목명	2015년도 수출액 (US\$)
5503	폴리에스터단섬유사	171,204,613
7208	철강후판	734,761,015
7208	열연강판	
7209	냉간압연강판	90,883,237
7210	부식방지처리강판	530,701,478
7219	스텐냉연강판 코일	49,069,280
7221	스테인리스 선재	444,274
7225	무방향성전기강판	162,353,780
7304	유정용 강관	89,093,997
7305	송유관	151,112,374
7306	스탠다드 강관	671,179,686
7306	연벽사각파이프	
7306	스테인리스용접강관	
7306	강벽사각파이프	
7312	PC강선	110,672,957
7317	강철 못	47,597,383
8450	세탁기	138,249,896
8504	유입식 변압기	376,188,672
해당 품목 수출액 합		3,323,512,642
대미 전체 수출액		70,130,052,444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6) p.11 표, UN Comtrade Database.

〈표 4-4〉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관세(상계관세 포함) 부과 현황

HS Code	품목명	2015년도 수출액 (US\$)
2804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833,173,288
2907	비스페놀A	196,990,209
2910	에피클로로히드린	18,603,231
2914	아세톤	68,197,117
2917	테레프탈산	427,929,709
2917	아디프산	
3904	PVC	77,072,613
5402	폴리우레탄/스판텍스	142,354,757
5501	아크릴 섬유	16,959,483
7225	방향성 전기강판	474,777,888
9001	광섬유	1,784,866,106
해당 품목 수출액 합		4,040,924,401
대중 전체 수출액		137,140,475,71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6) p.12 표, UN Comtrade Database.

위에서 살펴본 두 나라의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시행 양상 및 강도를 감안할 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액 시나리오에 비해,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 감소 관련 시나리오의 강도를 6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대중 수출 감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최상): $4.65\% \times 60\% = 2.79\%$

시나리오 2 (최악): $35.25\% \times 60\% = 21.15\%$

시나리오 3 (중간): $11\% \times 60\% = 6.6\%$

위와 같이 산정된 각 시나리오별 수출 감소비율 및 <표 4-1>에 제시된 결과를 활용하여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용인원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최상): $77\text{만 } 3,103\text{명} \times 2.79\% = 2\text{만 } 1,570\text{명}$

시나리오 2 (최악): 77만 3,103명*21.15% = 16만 3,511명

시나리오 3 (중간): 77만 3,103명*6.6% = 5만 1,025명

위의 분석 결과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및 자국문화중심주의 부상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연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단기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임을 보여준다.

다. 총 합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연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만 3,000명 남짓한 인원의 고용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면 최대 32만 6,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주요 무역 상대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고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전망 결과는 <표 4-5>에 정리되어 있다.¹²⁾

<표 4-5>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고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대중 수출 감소에 따른 고용총량 감소(A)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고용총량 감소(B)	고용총량 감소 합계(A+B)
최상 시나리오	21,570	21,448	43,018
최악 시나리오	163,511	162,588	326,099
중간 시나리오	51,025	50,737	101,762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최남석(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12) 물론 각 나라에 대해 최상, 최악 및 중간 시나리오 세 가지가 다양하게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총 9가지 전망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나, 편의상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세 가지 상황만을 상정하고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3절 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 영향

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나타난 임금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 분포

앞 절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의 연간 총 고용인원에 미칠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직종별 및 근로자 계층별 영향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대한 미시 자료인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는데, 전국 근로자 1인 이상 3만 2,000개 표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5년 자료의 경우 총 표본 수가 71만 8,578명에 달한다.

201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및 계층별 분포는 <표 4-6>과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¹³⁾

<표 4-6>에 따르면,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총 9개의 직종을 나눌 때, 201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전체 임금근로자 표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7.65%)와 ‘3. 사무 종사자’(27.47%) 및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7.09%)의 순으로 나타난다.

13)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상용직 혹은 임시·일용직) 및 고용형태(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보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상에 가용하지 않은 관계로, 관련된 분석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4-6〉 201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직종별 분포

직종 대분류	전체 표본 중 비율(%)
1. 관리자	1.95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65
3. 사무 종사자	27.47
4. 서비스 종사자	5.72
5. 판매 종사자	4.48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6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36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09
9. 단순노무 종사자	8.91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표 4-7〉 201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계층별 분포

구분 기준		전체 표본 중 비율(%)
성별	남성	63.50
	여성	36.50
연령대별	29세 이하	19.40
	30세 이상 39세 이하	29.76
	40세 이상 49세 이하	26.55
	50세 이상	24.30
학력별	고졸 이하	38.81
	초대졸	17.07
	대졸 이상	44.12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다음으로 <표 4-7>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표본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3.5%로 여성보다 훨씬 높고,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및 50세 이상 근로자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44%를 넘어 고졸 이하 근로자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한편 임금수준별 계층을 나눌 때에는 월급여총액 중 초과급여를 제외한 정액급여(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었다. 그 분기점은 각각 월 141만 2,000원, 191만 6,000원, 261만 5,000원, 그리

고 382만 1,000원이다.

실제 산업별 고용인원을 직종별 및 계층별로 분석하는 예를 보이기 위해, <표 4-8>과 <표 4-9>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중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직종별 및 근로자 계층별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8>을 <표 4-6>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구성은 전체 표본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해당 산업 내 과반수 근로자가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표본에 비해 세 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3. 사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표본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며,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은 전체 표본의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표 4-9>를 <표 4-7>과 비교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이 전체 표본 중 비율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확연히 높고, 대졸 이상의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더불어 전체 표본 기준 임금분위별 분포를 보면, 전체 표본에 비해 20~80% 사이에 해당 산업 근로자들이 평균보다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직종별 분포

직종 대분류	전체 표본 중 비율(%)
1. 관리자	1.3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95
3. 사무 종사자	22.70
4. 서비스 종사자	0.07
5. 판매 종사자	1.00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53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4.31
9. 단순노무 종사자	4.12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표 4-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근로자 계층별 구성비

구분 기준		해당 산업 표본 중 비율(%)
성별	남성	87.11
	여성	12.89
연령대별	29세 이하	14.70
	30세 이상 39세 이하	32.75
	40세 이상 49세 이하	34.60
	50세 이상	17.94
학력별	고졸 이하	64.23
	초대졸	13.62
	대졸 이상	22.15
전체 표본 임금분위별	20% 미만	16.00
	20% 이상 40% 미만	24.66
	40% 이상 60% 미만	27.08
	60% 이상 80% 미만	22.92
	80% 이상	9.33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2. 수출에 의해 유발된 산업 부문별 고용인원 산정

위의 방식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산업별로 직종 및 근로자 계층별 분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앞 절에서 고용 유발계수를 활용해 고용총량에 대한 영향을 추정할 때 한 발 더 나아가, 직종별,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및 임금분위별로 어떤 직종 및 계층의 근로자에게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의한 영향이 더 많이 미칠지에 대한 정량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수행해야 할 작업은, 앞서 수출이 이루어진 상품별로 고용유발계수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의 직접고용효과와 해당 및 타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인원을 합산(한국은행 2015, p.159)하여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각 부문에서의 수출이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어느 산업 부문의 고용을 유발하는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산업별 종사

자 특성을 활용하여 직종별 및 근로자 계층별 고용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앞서 <표 4-1>과 <표 4-2>에서 산업연관표 중분류 상품 부문별로 제시된 고용유발인원이, 실제로 어느 상품 부문에서 얼마만큼의 고용을 유발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연관표 중분류 각 상품별 대중 및 대미 수출에 의해 실제 유발된 부문별 고용인원은 다음의 행렬식에 의해 산출된다.¹⁴⁾

$$L \equiv \begin{pmatrix} L_1 \\ \vdots \\ L_n \end{pmatrix} = \hat{l}(I - A^d)^{-1} Y^d = \begin{pmatrix} l_1 & \dots & 0 \\ \dots & \dots & \dots \\ 0 & \dots & l_n \end{pmatrix} \begin{pmatrix} r_{11} & \dots & r_{1n} \\ \dots & \dots & \dots \\ r_{n1} & \dots & r_{nn} \end{pmatrix} \begin{pmatrix} Y_1^d \\ \vdots \\ Y_n^d \end{pmatrix}$$

여기서 벡터 $L \equiv \begin{pmatrix} L_1 \\ \vdots \\ L_n \end{pmatrix}$ 은 총 n 개 부문별로 실제 고용된 인원을 나타낸다. $\hat{l} \equiv \begin{pmatrix} l_1 & \dots & 0 \\ \dots & \dots & \dots \\ 0 & \dots & l_n \end{pmatrix}$ 은 부문별 고용계수, 즉 해당 부문 피용자 수를 총 산출

액(10억 원 단위)으로 나눈 값의 대각행렬이고, $(I - A^d)^{-1} \equiv \begin{pmatrix} r_{11} & \dots & r_{1n} \\ \dots & \dots & \dots \\ r_{n1} & \dots & r_{nn} \end{pmatrix}$

은 항등행렬에서 국산투입계수행렬을 뺀 후 역행렬을 구한 것으로서, 고용유발효과 산출에 사용되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을 나타낸다. 여기서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요소 r_{ij} 는 j 부문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i 부문에서 유발되는 산출효과를 의미한다. $Y^d \equiv \begin{pmatrix} Y_1^d \\ \vdots \\ Y_n^d \end{pmatrix}$ 은 각 부문의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를 나타내는 벡터이다.

14) 아래 부문별 고용인원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제시된 설명은 한국은행(2015), pp.10-17 및 pp.158-160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text{위의 식에서 } \hat{l}(I-A^d)^{-1} \equiv \begin{pmatrix} l_1 & \dots & 0 \\ \dots & \dots & \dots \\ 0 & \dots & l_n \end{pmatrix} \begin{pmatrix} r_{11} & \dots & r_{1n} \\ \dots & \dots & \dots \\ r_{n1} & \dots & r_{nn} \end{pmatrix} = \begin{pmatrix} l_1 r_{11} & \dots & l_1 r_{1n} \\ \dots & \dots & \dots \\ l_n r_{n1} & \dots & l_n r_{nn} \end{pmatrix} \text{ 행}$$

렬의 j 번째 열의 합 $\sum_{i=1}^n l_i r_{ij}$ 는 j 부문의 고용유발계수와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산식을 활용하여 부문별 고용인원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조사시스템에 게시된 2010 실측표 기준 2014 연장표 중 투입산출표(기초가격, 통합중분류) 내 국산투입계수표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2014 연장표 중 부속표 내 통합중분류 고용표에 제시된 상품별 고용계수를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hat{l}$ 및 $(I-A^d)^{-1}$ 을 구하고 부문별 수출액 벡터인 Y^d 까지 곱함으로써 부문별로 실제 고용된 인원을 계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부문별 고용인원 분석 결과는 <표 4-10>과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표 4-1>과 <표 4-2>에서 수출이 발생한 부문의 숫자가 전체 중분류 82개 상품 중 일부였던 데 반해,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유발된 부문별 고용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중분류 부문에 있어 고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¹⁵⁾

<표 4-10> 대중국 수출에 따른 연간 상품 부문별 고용인원

상품 중분류 코드 및 상품명		고용인원(명)
001	작물	1,039
002	축산물	242
003	임산물	134
004	수산물	213
005	농림어업 서비스	220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120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1,019
008	식료품	5,208
009	음료품	418
010	담배	13
011	섬유 및 의복	12,541

15) <표 4-10> 및 <표 4-11>에서 고용인원 총합은 <표 4-1> 및 <표 4-2>와 비교할 때 2~3명 정도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총 고용인원 산정방식이 다른 관계로 반올림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4-10〉의 계속

	상품 중분류 코드 및 상품명	고용인원(명)
012	가죽제품	3,091
013	목재 및 목제품	1,753
014	펄프 및 종이제품	4,383
015	인쇄 및 복제	2,226
016	석탄 및 석유제품	1,040
017	기초화학물질	7,232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4,652
019	화학섬유	335
020	의약품	853
021	비료 및 농약	388
022	기타 화학제품	8,004
023	플라스틱제품	24,993
024	고무제품	2,995
025	유리 및 유리제품	2,486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839
027	철강1차제품	5,077
028	철강가공제품	3,589
029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11,022
030	금속 주물	2,561
031	금속제품	19,516
032	일반목적용기계	21,454
033	특수목적용기계	33,417
034	전기장비	60,406
035	반도체	45,796
036	전자표시장치	3,805
037	기타 전자부품	18,587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4,732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11,300
040	가정용 전기기기	1,226
041	정밀기기	76,039
042	자동차	21,406
043	선박	1,094
044	기타 운송장비	284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36,420
0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3,755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1,097
048	수도	363

〈표 4-10〉의 계속

	상품 중분류 코드 및 상품명	고용인원(명)
049	폐수처리	930
0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4,303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2,138
052	토목건설	0
053	도소매서비스	101,691
054	육상운송서비스	24,672
055	수상운송서비스	212
056	항공운송서비스	816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16,835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7,900
059	통신서비스	3,785
060	방송서비스	1,408
061	정보서비스	1,135
0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5,954
063	출판서비스	1,589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236
065	금융서비스	12,450
066	보험서비스	5,611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3,380
068	주거서비스	0
069	부동산서비스	10,969
0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1,190
071	연구개발	1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8,730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14,488
074	사업지원서비스	35,732
075	공공행정 및 국방	2,852
076	교육서비스	751
077	의료 및 보건	3,140
078	사회복지서비스	0
079	문화서비스	672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959
081	사회단체	2,653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5,541
	합계	773,106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표 4-11〉 대미국 수출에 따른 연간 상품 부문별 고용인원

상품 중분류 코드 및 상품명	고용인원(명)
001 작물	640
002 축산물	128
003 임산물	84
004 수산물	184
005 농림어업 서비스	139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58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336
008 식료품	2,747
009 음료품	283
010 담배	129
011 섬유 및 의복	8,334
012 가죽제품	951
013 목재 및 목제품	1,272
014 펄프 및 종이제품	3,159
015 인쇄 및 복제	1,307
016 석탄 및 석유제품	518
017 기초화학물질	1,345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281
019 화학섬유	300
020 의약품	404
021 비료 및 농약	134
022 기타 화학제품	2,654
023 플라스틱제품	15,281
024 고무제품	7,064
025 유리 및 유리제품	1,128
026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301
027 철강1차제품	5,387
028 철강가공제품	2,292
029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4,505
030 금속 주물	2,024
031 금속제품	16,988
032 일반목적용기계	18,339
033 특수목적용기계	17,436
034 전기장비	17,191
035 반도체	2,640
036 전자표시장치	2,146
037 기타 전자부품	4,251
038 컴퓨터 및 주변기기	3,982

〈표 4-11〉의 계속

	상품 중분류 코드 및 상품명	고용인원(명)
039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10,155
040	가정용 전기기기	4,616
041	정밀기기	6,912
042	자동차	73,929
043	선박	1,504
044	기타 운송장비	2,644
04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26,862
046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2,005
047	가스, 증기 및 온수	550
048	수도	241
049	폐수처리	547
050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2,640
051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932
052	토목건설	0
053	도소매서비스	61,747
054	육상운송서비스	14,689
055	수상운송서비스	120
056	항공운송서비스	454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8,636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628
059	통신서비스	2,314
060	방송서비스	849
061	정보서비스	647
0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3,760
063	출판서비스	1,533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154
065	금융서비스	7,579
066	보험서비스	3,160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1,934
068	주거서비스	0
069	부동산서비스	6,424
0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829
071	연구개발	0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1,310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10,420
074	사업지원서비스	21,198

〈표 4-11〉의 계속

상품 중분류 코드 및 상품명		고용인원(명)
075	공공행정 및 국방	1,546
076	교육서비스	422
077	의료 및 보건	1,735
078	사회복지서비스	0
079	문화서비스	1,584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552
081	사회단체	1,559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3,579
합계		461,241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표 4-1〉~〈표 4-2〉와 〈표 4-10〉~〈표 4-11〉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상품 중 ‘001. 작물’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표 4-1〉에서 ‘001. 작물’ 부문의 2015년도 대중 연간 수출액 6,100만 5,448 달러에 의해 작물 부문에서의 직접고용 및 여러 부문의 유발고용을 합친 총 고용효과가 고용유발계수 4.2에 의한 288명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반면 〈표 4-10〉에서 ‘001. 작물’ 부문 고용인원이 1,039명으로 산정된 것은, 해당 부문에서의 수출에 따라 동일 부문에 고용된 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부문에서의 수출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 유발된 고용인원까지 합산한 결과이다.

따라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산업부문별 근로자 특성의 차이를 활용하여 어떤 직종 및 계층의 근로자가 보호무역주의의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실제 고용인원을 나타내는 〈표 4-10〉~〈표 4-11〉의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산업연관표 상품 중분류 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코드로 변환하여, 각 산업부문별로 대중 및 대미 수출에 의해 고용된 인원을 산정한 결과는 〈표 4-12〉와 〈표 4-13〉에 제시되어 있다.¹⁶⁾

16) 코드 변환 시 하나의 산업연관표 코드가 여러 개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산업연관표 상품 중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고용인원을 이에 대응하는 여러 개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대해 단순 분할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기본부문 상품 세분류 단위 수출액이나 생산유발액 등을 기준으로

〈표 4-12〉 대중국 수출에 따른 연간 산업 부문별 고용인원

산업 중분류 코드 및 산업명		고용인원(명)
01	농업	834.83
02	임업	726.83
03	어업	286.33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20
06	금속 광업	509.5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509.5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4,829.33
10	식료품 제조업	10,410.86
11	음료 제조업	418
12	담배 제조업	13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1,473.36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7,816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45.5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753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585.8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26
19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242.86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611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53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7,98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325
24	1차 금속 제조업	22,249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4,960.86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9,566.33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346.33
28	전기장비 제조업	31,42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9,975.3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609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78
32	가구 제조업	5,202.86
33	기타 제품 제조업	5,202.86

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하나의 산업연관표 중분류 코드에 속하는 산업들은 고용된 근로자 특성에 있어 서로 유사할 것으로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 분할 방식을 택하더라도 분석 결과의 질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표 4-12>와 <표 4-13>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임을 감안하여, 굳이 고용인원을 반올림하지 않은 채로 제시하고 있다.

〈표 4-12〉의 계속

	산업 중분류 코드 및 산업명	고용인원(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852
36	수도사업	363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65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151.5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5
41	종합 건설업	2,138
42	전문직별 공사업	0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3,897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36,048.5
47	소매업;자동차 제외	33,897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4,672
50	수상 운송업	212
51	항공 운송업	816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6,835
55	숙박업	9,174
56	음식점 및 주점업	8,950
58	출판업	4,566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36
60	방송업	1,408
61	통신업	3,785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977
63	정보서비스업	1,135
64	금융업	7,070
65	보험 및 연금업	6,456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070
68	부동산업	10,969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1,190
70	연구개발업	1
71	전문서비스업	10,210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829.33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829.33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17,866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27,231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852
85	교육 서비스업	751
86	보건업	3,140

〈표 4-12〉의 계속

산업 중분류 코드 및 산업명		고용인원(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0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4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183
94	협회 및 단체	2,653
95	수리업	1,847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47
97	가구 내 고용활동	1,847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
99	국제 및 외국기관	0
합계		773,106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표 4-13〉 대미국 수출에 따른 연간 산업 부문별 고용인원

산업 중분류 코드 및 산업명		고용인원(명)
01	농업	494.33
02	임업	450.33
03	어업	230.33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58
06	금속 광업	168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68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3,473.33
10	식료품 제조업	6,584.43
11	음료 제조업	283
12	담배 제조업	129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8,004.43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642.5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75.5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272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996.43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07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355.4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714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04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34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29
24	1차 금속 제조업	14,208

〈표 4-13〉의 계속

산업 중분류 코드 및 산업명		고용인원(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331.4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5,478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04
28	전기장비 제조업	13,211.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6,57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2,524.5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148
32	가구 제조업	3,837.43
33	기타 제품 제조업	3,837.43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555
36	수도사업	241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73.5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320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73.5
41	종합 건설업	932
42	전문직별 공사업	0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0,582.33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21,902.33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20,582.33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4,689
50	수상 운송업	120
51	항공 운송업	454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8,636
55	숙박업	5,842
56	음식점 및 주점업	5,314
58	출판업	3,413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54
60	방송업	849
61	통신업	2,314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880
63	정보서비스업	647
64	금융업	4,273
65	보험 및 연금업	3,643.5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273
68	부동산업	6,424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829
70	연구개발업	0
71	전문서비스업	6,138.5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473.33

〈표 4-13〉의 계속

	산업 중분류 코드 및 산업명	고용인원(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73.33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0,599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16,254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46
85	교육 서비스업	422
86	보건업	1,735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0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28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080
94	협회 및 단체	1,559
95	수리업	1,193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93
97	가구 내 고용활동	1,193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
	합계	461,241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표 4-12〉와 〈표 4-13〉을 살펴보면 고용 차원에서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우선 〈표 4-12〉를 보면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11만 명 가까이,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9만 명 가까이가 대중국 수출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 차원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4-13〉에 따르면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8만 명을 넘는 고용이 대미국 수출에 의해 창출되어,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산업부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수출에 따른 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 고용인원 산정

이제 〈표 4-12〉와 〈표 4-13〉에 제시된 산업 부문별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에 의해 창출된 고용인원이, 각 부문의 근로자 구성 비율 차이에 따라 직종 및 근로자 특성별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표 4-14>는 앞서 <표 4-8>과 <표 4-9>에서 예시를 보였듯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산업부문별 직종 구성 비율을 바탕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개 직종에 걸쳐 대중국 및 미국 수출에 따른 고용인원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¹⁷⁾

<표 4-14>에 따르면, 대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로 인해 가장 많은 고용인원이 발생한 직종은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30.27%)와 ‘3. 사무 종사자’(27.97%)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4-6>에 제시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전체 표본의 직종별 분포와 비교할 때,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분포 비율이 전체 표본 내 비율(17.09%)보다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무 종사자 비율은 전체 표본에서와 거의 유사하다.

<표 4-14>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의 직종 분포에 있어 대상 국가 간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1. 관리자’와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전체 창출된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중국 수출의 경우 대미국 수출에 비해 2.3%p가량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미국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에 비해 2.1%p 정도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잘 알려진 국제무역이론인 헥서-올린 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헥서-올린 모형은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할 때 각국이 요소부존도가 높은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에 특화하여 상대 국가에 수출하게 된다고 예측한다.

17) 201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대상이 된 임금근로자 중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7.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및 ‘99. 국제 및 외국기관’에 종사하는 표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 고용된 인원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고용인원 총합이 앞서 제시한 <표 4-12> 및 <표 4-13>에서보다 적어진다.

18) 헥서-올린 모형에 대한 설명은 김인준(1998), pp.477-492를 참조하였다.

〈표 4-14〉 대중국 및 미국 수출로 인한 직종별 고용인원

(단위: 명, %)

	중국	미국	합계
1. 관리자	15,215 (1.98)	8,808 (1.92)	24,023 (1.96)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0,570 (16.99)	67,710 (14.77)	198,280 (16.16)
3. 사무 종사자	214,415 (27.90)	128,693 (28.07)	343,108 (27.97)
4. 서비스 종사자	15,514 (2.02)	9,503 (2.07)	25,017 (2.04)
5. 판매 종사자	46,965 (6.11)	27,865 (6.08)	74,830 (6.10)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71 (0.15)	730 (0.16)	1,901 (0.15)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4,311 (7.07)	34,195 (7.46)	88,506 (7.21)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7,764 (29.64)	143,591 (31.32)	371,355 (30.27)
9. 단순노무 종사자	62,482 (8.13)	37,407 (8.16)	99,889 (8.14)
합계	768,407	458,502	1,226,909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이를 고려할 때 대중국 무역에 있어 우리나라는 숙련도가 높은 노동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에 특화되어 있고, 대미국 무역에 있어서는 저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주로 수출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숙련 노동이라 할 수 있는 ‘1. 관리자’와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중국 수출에서 더 높고,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이라 할 수 있는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중이 대미국 수출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헥서-올린 모형의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15>는 역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산업부문별 근로자 특성의 구성 비율을 바탕으로, 대중국 및 미국 수출에 따른 고용인원이 근로자 계층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¹⁹⁾

〈표 4-15〉 대중국 및 미국 수출로 인한 근로자 계층별 고용인원

(단위: 명, %)

		중국	미국	합계
성별	남성	560,048 (72.88)	342,364 (74.67)	902,412 (73.55)
	여성	208,359 (27.12)	116,138 (25.33)	324,497 (26.45)
	합계	768,407	458,502	1,226,909
연령대별	29세 이하	146,240 (19.03)	80,108 (17.47)	226,348 (18.45)
	30세 이상 39세 이하	251,772 (32.77)	145,301 (31.69)	397,073 (32.36)
	40세 이상 49세 이하	211,499 (27.52)	132,327 (28.86)	343,826 (28.02)
	50세 이상	158,896 (20.68)	100,767 (21.98)	259,663 (21.16)
	합계	768,407	458,503	1,226,910
학력별	고졸 이하	356,145 (46.35)	225,982 (49.29)	582,127 (47.45)
	초대졸	125,435 (16.32)	72,200 (15.75)	197,635 (16.11)
	대졸 이상	286,826 (37.33)	160,320 (34.97)	447,146 (36.44)
	합계	768,406	458,502	1,226,908
전체 표본 임금분위별	20% 미만	137,651 (17.91)	84,829 (18.50)	222,480 (18.13)
	20% 이상 40% 미만	155,660 (20.26)	96,843 (21.12)	252,503 (20.58)
	40% 이상 60% 미만	167,720 (21.83)	103,835 (22.65)	271,555 (22.13)
	60% 이상 80% 미만	163,611 (21.29)	95,997 (20.94)	259,608 (21.16)
	80% 이상	143,766 (18.71)	76,998 (16.79)	220,764 (17.99)
	합계	768,408	458,502	1,226,910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19) 고용인원에 대한 반올림으로 인해, 카테고리별 분석 결과에서 고용인원 합계가 1~2명 정도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4-15>에 따르면, 대중국 및 미국 수출에 의해 고용된 임금근로자 중 남성의 비중이 73%를 넘는데, 이는 앞서 <표 4-7>에서 살펴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전체 표본 중 남성 근로자의 비중 63.5%를 10%p 정도 초과하는 것이다. 더불어 전체 표본 임금근로자 연령대와 비교할 때, 30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대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편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비중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전체 표본에 비해 8.6%p가량 높고, 대졸 이상의 비중은 전체 표본보다 7.7%p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분위별로는 전체 표본 중간층에 해당하는 20% 이상 80% 미만 사이의 비중이 약간이나마 높게 나타난다.

<표 4-15>는 수출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의 근로자 특성별 분포에 있어,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앞서 직종별 분포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와 유사하게, 헥서-올린 모형의 예측과 일부 부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학력별로 보았을 때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은 대미국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에 비해 2.9%p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대졸 이상 일자리의 비중은 대중국 수출에서 대미국 수출에 비해 2.4%p가량 더 높다. 한편 임금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60%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미국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에 비해 2.3%p 가량 높고, 60% 이상 근로자 비중은 반대로 대중국 수출에서 2.3%p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4. 수출 감소가 근로자 직종 및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전망

<표 4-11>과 <표 4-12>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시나리오별 각 직종 및 계층별 근로자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중국과 미국에 대해 각각 3가지 시나리오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합하면 총 9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나, 분석 결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두 나라 모두에 대해 최상, 최악 및 중간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3가지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감소가 각 직종 및 계층별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가정은, 각 국가별 최상, 최하 및 중간 등 3가지 시나리오별로 상정되는 수출 감소율이 모든 부문에 대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상품 및 산업별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 따른 타격이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 총량의 감소폭도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중분류 부문별로 각각 차별화된 수출 감소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반영하여 전체 수출액의 시나리오별 감소 비율이 개별 부문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때 수출이 발생한 상품 부문별 수출 감소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실제로 고용이 발생한 산업 부문별 고용 감소 비율도 동일하게 된다.²⁰⁾

또 다른 가정은 특정 산업부문에서 수출 감소로 인한 고용인원 감축이 발생할 때, 현재 해당 산업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직종 및 근로자 특성 비율을 그대로 따라 일자리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산업부문별 고용 감소를 야기할 때에는 해당 부문 내에 고용된 근로자들 중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불안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직종 및 계층별로 어떤 유형의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협상력이 강하거나 약한지 정량화하기 힘들고, 이 부분에서의 정량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근로자 특성별 협상력의 차이가 일자리 상실 확률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을 산출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산업부문 내

20) 최남석(2016)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7개 혹은 8개 산업별로 동일 시나리오하에서도 수출 감소 비율이 차별화되는 방식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산업이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 품목 중 일부에만 해당되어 대다수 상품 및 산업에 대해서는 최남석(2016)을 근거로 수출 감소 비율을 차별화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미국 수출에 있어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 7~8개 산업에 대해 최남석(2016)이 산정한 시나리오별 수출 감소 비율 평균값을 전체 산업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되, 상품 혹은 산업별 수출 감소 비율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최남석(2016)의 결과를 활용하지 않았다.

고용되어 있는 다른 직종 및 계층의 근로자들 간 수출 감소에 따른 실직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위의 두 가정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시나리오별로 각 직종 및 계층별 근로자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6>~<표 4-21>에 제시되어 있다.²¹⁾

가.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표 4-16>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직종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 중국과 미국 모두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중국 (명)	미국 (명)	합계 (명)	직종별 임금근로자 수 (천 명)	직종별 임금근로자 수 대비 비중 (%)
1. 관리자	424	410	834	4,660	0.16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643	3,149	6,792		
3. 사무 종사자	5,982	5,984	11,966	4,217	0.28
4. 서비스 종사자	433	442	875	3,595	0.10
5. 판매 종사자	1,310	1,296	2,60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3	34	67	54	0.12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15	1,590	3,105	3,965	0.41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355	6,677	13,032		
9. 단순노무 종사자	1,743	1,739	3,482	3,136	0.11
합계	21,438	21,321	42,759	19,627	0.22

주: 직종별 및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6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 여기서 대분류 직종 9개를 6개로 재분류한 결과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랐음.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최남석(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21) 앞서 <표 4-5>에 제시된 고용감소 총량과 비교할 때, <표 4-16>~<표 4-21>에 제시된 감소인원의 합계가 더 적게 나타난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표본에 일부 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부문 고용인원이 분석에서 제외된 데 기인한다. 더불어 <표 4-16>~<표 4-21> 안에서도 고용인원 반올림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표 4-16>은 직종별로 분석할 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기능·기계조작 종사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과 미국 모두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있어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해당 직종에서 예상되는 고용감소 인원이 1만 6,000명 남짓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타격을 받는 비중도 0.4%가 넘어 단연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외에 사무 종사자 역시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1만 2,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해당 직종 임금근로자 중 0.3%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6>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의해 줄어들 일자리 수의 직종별 분포가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 간에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 관리자’와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서 줄어들 일자리는 대중국 수출에서 대미국 수출에 비해 더 높다. 반면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직종에서 감소할 고용인원은 대미국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각국에 대한 수출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의 직종별 분포에 있어 헥서-올린 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된다. 즉 고숙련 직종의 비중이 대중국 수출에서 더 높고, 저숙련 직종의 비중은 대미국 수출에서 더 높은 것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할 경우, 타격을 받는 직종의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가 위와 같이 도출되는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표 4-17>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타격을 받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숫자가 여성에 비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성별 전체 임금근로자 중 타격을 받는 비중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남성 임금근로자 중 0.3%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근로자들이 타격을 입는 인원 수뿐만 아니라 각 연령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에도 있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30대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0.3% 가까이는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4-17〉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 계층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 중국과 미국 모두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중국 (명)	미국 (명)	합계 (명)	그룹별 임금근로자 수 (천 명)	그룹별 임금근로자 수 대비 비중 (%)
성별	남성	15,625	15,920	31,545	11,008	0.29
	여성	5,813	5,400	11,213	8,619	0.13
	합계	21,438	21,320	42,758	19,627	0.22
연령 대별	29세 이하	4,080	3,725	7,805	3,789	0.21
	30세 이상 39세 이하	7,024	6,756	13,780	4,721	0.29
	40세 이상 49세 이하	5,901	6,153	12,054	4,900	0.25
	50세 이상	4,433	4,686	9,119	6,216	0.15
	합계	21,438	21,320	42,758	19,627	0.22
학력별	고졸 이하	9,936	10,508	20,444	10,021	0.20
	초대졸	3,500	3,357	6,857	9,607	0.23
	대졸 이상	8,002	7,455	15,457		
	합계	21,438	21,320	42,758	19,627	0.22
전체 표본 임금 분위별	20% 미만	3,840	3,945	7,785	3,925.4	0.20
	20% 이상 40% 미만	4,343	4,503	8,846	3,925.4	0.23
	40% 이상 60% 미만	4,679	4,828	9,507	3,925.4	0.24
	60% 이상 80% 미만	4,565	4,464	9,029	3,925.4	0.23
	80% 이상	4,011	3,580	7,591	3,925.4	0.19
합계		21,438	21,320	42,758	19,627	0.22

주: 각 그룹별 및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6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 해당 자료의 학력별 분류에서 전문대졸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하나로 묶인 결과만 가용한 관계로 이를 따랐음.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최남석(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학력별로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직 위기에 놓인 인원 수 기준으로 비교하면 고졸 이하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초대졸과 대졸 이상을 하나로 묶어 고졸 이하와 비교할 경우,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의해 타격을 입는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의 0.20%, 초대졸 이상 근로자의 0.23%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금분위별로는 20~80%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실직 위험이 20% 미만이나 80% 이상에 속하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5개 분위 중에서는 40~60%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실직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가장 높게 나타난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 해당 분위 근로자들의 0.2%가 넘는 9,500명 남짓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7>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의해 감소하는 일자리의 근로자 특성별 분포에 있어,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 사이에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남성, 40세 이상, 고졸 이하 및 임금분위 60% 미만 임금근로자 계층에서는 대미국 수출에서 줄어드는 일자리 수가 대중국 수출보다 더 많다. 반면 여성, 39세 이하, 초대졸 이상 및 임금분위 60% 이상 임금근로자 계층에서는 대중국 수출에서 감소하는 일자리 수가 대미국 수출을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 학력별 및 임금분위별 일자리 감소 양상의 차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헥서-올린 모형의 예측과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학력별로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대미국 수출에서 더 높았고, 대졸 이상 일자리의 비중은 대중국 수출에서 더 높았던 것이,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의해 감소하는 일자리의 학력별 분포 양상이 위와 같이 나타나게 된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앞서 임금분위 60% 미만 근로자 비중이 대미국 수출에서 더 높았고, 임금분위 60% 이상 근로자 비중은 대중국 수출에서 더 높았던 것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의 임금분위별 분포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표 4-18>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 확산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 전체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중 3% 이상, 즉 12만 명 이상이 실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전체 사무근로자의 2.1% 이상에 해당하는 9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9>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 전체 남성 임금근로자 중 2.2%가량이 실직 위험에 처할 것임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30대 임금근로자 중 2.2%가량에 해당하는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학력별로는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의 1.6%에 육박하는 15만 5,000명가량이, 초대졸 이상 근로자 중 1.8% 정도인 17만 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금분위별로는 20~80%에 속하는 근로자들 중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 실직 위험에 처하는 비중이 1.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5개 분위별로는 40~6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1.8% 이상에 해당하는 7만 2,000명 남짓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8>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직종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 중국과 미국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중국 (명)	미국 (명)	합계 (명)	직종별 임금근로자 수 (천 명)	직종별 임금근로자 수 대비 비중 (%)
1. 관리자	3,218	3,105	6,323	4,660	1.24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616	23,868	51,484		
3. 사무 종사자	45,349	45,364	90,713	4,217	2.15
4. 서비스 종사자	3,281	3,350	6,631	3,595	0.73
5. 판매 종사자	9,933	9,822	19,755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8	257	505	54	0.94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487	12,054	23,541	3,965	3.09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8,172	50,616	98,788		
9. 단순노무 종사자	13,215	13,186	26,401	3,136	0.84
합계	162,519	161,622	324,141	19,627	1.65

주: 직종별 및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6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 여기서 대분류 직종 9개를 6개로 재분류한 결과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랐음.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최남석(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표 4-19〉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 계층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 중국과 미국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중국 (명)	미국 (명)	합계 (명)	그룹별 임금근로자 수 (천 명)	그룹별 임금근로자 수 대비 비중 (%)
성별	남성	118,450	120,683	239,133	11,008	2.17
	여성	44,068	40,939	85,007	8,619	0.99
	합계	162,518	161,622	324,140	19,627	1.65
연령 대별	29세 이하	30,930	28,238	59,168	3,789	1.56
	30세 이상 39세 이하	53,250	51,219	104,469	4,721	2.21
	40세 이상 49세 이하	44,732	46,645	91,377	4,900	1.86
	50세 이상	33,606	35,520	69,126	6,216	1.11
	합계	162,518	161,622	324,140	19,627	1.65
학력별	고졸 이하	75,325	79,659	154,984	10,021	1.55
	초대졸	26,530	25,450	51,980	9,607	1.76
	대졸 이상	60,664	56,513	117,177		
	합계	162,519	161,622	324,141	19,627	1.65
전체 표본 임금 분위별	20% 미만	29,113	29,902	59,015	3,925.4	1.50
	20% 이상 40% 미만	32,922	34,137	67,059	3,925.4	1.71
	40% 이상 60% 미만	35,473	36,602	72,075	3,925.4	1.84
	60% 이상 80% 미만	34,604	33,839	68,443	3,925.4	1.74
	80% 이상	30,406	27,142	57,548	3,925.4	1.47
합계		162,518	161,622	324,140	19,627	1.65

주: 각 그룹별 및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2016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 해당 자료의 학력별 분류에서 전문대졸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하나로 묶인 결과만 가용한 관계로 이를 따랐음.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최남석(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다. 중간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표 4-20〉은 대중국 및 미국 수출 감소에 있어 모두 중간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타격 정도가 얼마나 될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관련 중간 시

나리오하에서 전체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중 1% 가까이에 이르는 3만 8,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전체 사무근로자의 0.7%가량 되는 2만 8,000명 이상 역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0〉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직종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 중국과 미국 모두 중간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중국 (명)	미국 (명)	합계 (명)	직종별 임금근로자 수 (천 명)	직종별 임금근로자 수 대비 비중 (%)
1. 관리자	1,004	969	1,973	4,660	0.39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618	7,448	16,066		
3. 사무 종사자	14,151	14,156	28,307	4,217	0.67
4. 서비스 종사자	1,024	1,045	2,069	3,595	0.23
5. 판매 종사자	3,100	3,065	6,165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7	80	157	54	0.29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584	3,761	7,345	3,965	0.96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032	15,795	30,827		
9. 단순노무 종사자	4,124	4,115	8,239	3,136	0.26
합계	50,714	50,434	101,148	19,627	0.52

주: 직종별 및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6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 여기서 대분류 직종 9개를 6개로 재분류한 결과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랐음.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최남석(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표 4-21〉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 계층별 고용인원 감소 예측 : 중국과 미국 모두 중간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중국 (명)	미국 (명)	합계 (명)	그룹별 임금근로자 수 (천 명)	그룹별 임금근로자 수 대비 비중 (%)
성별	남성	36,963	37,660	74,623	11,008	0.68
	여성	13,752	12,775	26,527	8,619	0.31
	합계	50,715	50,435	101,150	19,627	0.52
연령대 별	29세 이하	9,652	8,812	18,464	3,789	0.49
	30세 이상 39세 이하	16,617	15,983	32,600	4,721	0.69
	40세 이상 49세 이하	13,959	14,556	28,515	4,900	0.58
	50세 이상	10,487	11,084	21,571	6,216	0.35
	합계	50,715	50,435	101,150	19,627	0.52
학력별	고졸 이하	23,506	24,858	48,364	9,607	0.55
	초대졸	8,279	7,942	16,221		
	대졸 이상	18,931	17,635	36,566		
	합계	50,716	50,435	101,151	19,627	0.52
전체 표본 임금 분위별	20% 미만	9,085	9,331	18,416	3,925.4	0.47
	20% 이상 40% 미만	10,274	10,653	20,927	3,925.4	0.53
	40% 이상 60% 미만	11,069	11,422	22,491	3,925.4	0.57
	60% 이상 80% 미만	10,798	10,560	21,358	3,925.4	0.54
	80% 이상	9,489	8,470	17,959	3,925.4	0.46
	합계	50,715	50,436	101,151	19,627	0.52

주: 각 그룹별 및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2016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것임. 해당 자료의 학력별 분류에서 전문대졸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하나로 묶인 결과만 가용한 관계로 이를 따랐음.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최남석(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표 4-21〉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관련 중간 시나리오가 중국과 미국 모두에 대해 실현될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계층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기준으로 중간 시나리오하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의 0.7%에 이르는 7만 5,000명 가까이가 수출 감소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49세 이하 임금근로자 6만 1,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해당 연령대 전체 임금근로자의 0.6%가 넘는 인원이다.

학력별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중간 시나리오 실현을 가정할 때 고졸 이하 근로자 중 0.5% 정도 되는 4만 8,000명 남짓, 초대졸과 대졸 이상을 하나로 묶은 초대졸 이상 임금근로자 중 0.6%가량 되는 5만 3,000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금분위별로 볼 때는 중간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80%에 속하는 임금근로자들이 다른 분위 근로자들보다 좀 더 타격을 크게 받아 대략 0.5~0.6%가량의 근로자들이 실직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개 분위별로는 40~60%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0.6% 가까이에 해당하는 2만 2,000명 이상이 중간 시나리오하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제4절 소 결

지금까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대중국 및 미국 수출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고용 총량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 후, 방대한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직종 및 근로자 특성별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이 <표 4-22>~<표 4-24>에 제시되어 있다.²²⁾

22) <표 4-22>~<표 4-24>에서 카테고리별로 가장 타격이 큰 그룹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해당 그룹 전체 임금근로자 중 감소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과 차이가 있

<표 4-22>~<표 4-24>를 살펴볼 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초래되는 고용총량의 감소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전제하더라도 4만 3,000명이 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무려 32만 6,000명 이상에 달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전체 임금근로자 수와 대비할 경우, 이는 각각 0.2%와 1.7%에 달하는 숫자이다.

〈표 4-22〉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중국	미국	합계
총 고용인원 감소	21,570명	21,448명	43,018명
가장 타격이 큰 직종 및 감소 고용인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6,355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6,677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13,032명
가장 타격이 큰 성별 및 감소 고용인원	남성 : 15,625명	남성 : 15,920명	남성 : 31,545명
가장 타격이 큰 연령대 및 감소 고용인원	30대 : 7,024명	30대 : 6,756명	30대 : 13,780명
가장 타격이 큰 학력수준 및 감소 고용인원	고졸 이하 : 9,936명	고졸 이하 : 10,508명	고졸 이하 : 20,444명
가장 타격이 큰 임금분위 및 감소 고용인원	40% 이상 60% 미만 : 4,679명	40% 이상 60% 미만 : 4,828명	40% 이상 60% 미만 : 9,507명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최남석(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을 수 있다.

〈표 4-23〉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중국	미국	합계
총 고용인원 감소	163,511명	162,588명	326,099명
가장 타격이 큰 직종 및 감소 고용인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8,172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0,616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8,788명
가장 타격이 큰 성별 및 감소 고용인원	남성: 118,450명	남성: 120,683명	남성: 239,133명
가장 타격이 큰 연령대 및 감소 고용인원	30대: 53,250명	30대: 51,219명	30대: 104,469명
가장 타격이 큰 학력수준 및 감소 고용인원	고졸 이하: 75,325명	고졸 이하: 79,659명	고졸 이하: 154,984명
가장 타격이 큰 임금분위 및 감소 고용인원	40% 이상 60% 미만: 35,473명	40% 이상 60% 미만: 36,602명	40% 이상 60% 미만: 72,075명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최남석(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표 4-24〉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중간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중국	미국	합계
총 고용인원 감소	51,025명	50,737명	101,762명
가장 타격이 큰 직종 및 감소 고용인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032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795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30,827명
가장 타격이 큰 성별 및 감소 고용인원	남성: 36,963명	남성: 37,660명	남성: 74,623명
가장 타격이 큰 연령대 및 감소 고용인원	30대: 16,617명	30대: 15,983명	30대: 32,600명
가장 타격이 큰 학력수준 및 감소 고용인원	고졸 이하: 23,506명	고졸 이하: 24,858명	고졸 이하: 48,364명
가장 타격이 큰 임금분위 및 감소 고용인원	40% 이상 60% 미만: 11,069명	40% 이상 60% 미만: 11,422명	40% 이상 60% 미만: 22,491명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최남석(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각 시나리오별 전체 감소 전망 고용인원 중 3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1만 3,000명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10만 명 가까이 해당 직종 일자리에서 실직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의해 여성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 감소 대비 73.3%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3만 1,000명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는 24만 명 가까운 남성 근로자들이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령대별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그룹인 3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감소 전망 고용인원 중 3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1만 4,000명 가까이,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는 10만 명 이상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력별로는 인원 수 기준으로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전체 감소인원 대비 4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2만 명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15만 명이 넘는 고용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분위별로 봤을 때, 임금분위 40~60%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큰 고용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고용감소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정의상 전체 임금근로자 중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큰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1만 명 가까이에서 많게는 7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제 5 장 결 론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의 4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 중 일부가 최근 이들 나라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인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핵심 방법론은 산업연관분석이다. 다만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에서 그러하듯 단순히 고용총량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직종 및 근로자 계층별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이 어떻게 차별화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정된 세 가지 시나리오하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총량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연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만 3,000명 남짓한 인원의 고용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최대 32만 6,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전체 임금근로자 수 대비 각각 0.2%와

1.7%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만약 각 시나리오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들이 모두 실업자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6년 11월 기준 3.1%에서 최상의 시나리오 가정 시 3.3%로 0.2%p 상승하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4.3%로 무려 1.2%p 높아질 수 있다.²³⁾

물론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가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단기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도출된 실업률 상승 전망이 과대추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에 대한 영향만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유발)계수가 아닌 고용(유발)계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취업자에 대한 영향까지 분석하기 위해 고용(유발)계수 대신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부정적 과급효과는 임금근로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때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조사시스템에 게시된 2010 실측표 기준 2014 연장표 중 부속표 내 통합중분류 고용표에 제시된 상품별 취업계수의 평균(6.4) 및 고용계수의 평균(4.6)을 비교하고, 상품별 취업유발계수의 평균(12.5)을 상품별 고용유발계수의 평균(8.5)과 비교해 보면, 취업(유발)계수가 고용(유발)계수보다 39~47%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실업률 상승폭을 임금근로자에 대한 영향만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보다 더 암울한 결과가 일시적으로나마 나타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방대한 미시 자료인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직종별 및 근로자 계층별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직종별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기능·기계조작 종사자들에게 가장

23)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11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2,744만 6,000명이고, 실업자는 85만 4,000명이다.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있어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해당 직종에서 예상되는 고용감소 인원이 1만 6,000명 남짓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타격을 받는 비중도 0.4%가 넘어 여러 직종들 중 단연 가장 높다.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는 전체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중 3% 이상, 즉 12만 명 이상이 실직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분류 직종 중 사무종사자 역시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1만 2,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해당 직종 임금근로자 중 0.3% 가까이에 달하는 인원이다. 더불어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전체 사무근로자의 2.1% 이상에 해당하는 9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타격을 받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숫자가 여성에 비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성별 전체 임금근로자 중 타격을 받는 비중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한다. 즉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남성 임금근로자 중 0.3%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경우엔 전체 남성 임금근로자 중 2.2%가량이 실직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근로자들이 실직 위험에 놓인 인원 수뿐만 아니라 각 연령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중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30대 임금근로자 전체의 0.3% 가까이는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30대 임금근로자 중 2.2%가량에 해당하는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로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직 위기에 놓인 인원 수 기준으로 비교할 때 고졸 이하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초대졸과 대졸 이상을 하나로 묶어 고졸 이하와 비교할 경우,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에서 타격을 입는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의 0.20%, 초대졸 이상 근로자의 0.23%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의 1.6%에 육박하는 15만 5,000명가량

이, 초대졸 이상 근로자 중 1.8% 정도인 17만 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임금분위별로는 40~60%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실직 가능성이 타 분위에 비해 약간이나마 가장 높게 나타난다.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 해당 임금분위 근로자들의 0.2%가 넘는 9,500명 남짓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에는 해당 임금분위 근로자들의 1.8% 이상인 7만 2,000명 남짓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제2절 정책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출 대상 국가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 감소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저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과 병행하여, 어떤 계층의 근로자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큰 시각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상정책과 외교안보정책 등 각종 정책 분야를 망라하여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가능하다면 되돌리거나 최소한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를 취임 직후에 바로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로 인한 단기적 충격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안보 이슈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발생한 의견 대립이 양국 간 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신속히 무마하기 위해 성급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되는 타격이 단순히 향후 2~3년간 경상수지를 다소 악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원래 경로보다 약간 낮추는 데 그칠 것이므로 단기적 충격만 잘 버티면 금방 원상회복이 가능할 거라 낙관하고 별다른 정책 대응을 하지 않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정도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의 1절 분석 결과 요약에서 강조하였듯,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총량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최상의 시나리오하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만 3,000명 남짓,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최대 32만 6,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강호(2016)가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인한 극심한 구조조정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산업에서 2016년 1/4분기부터 3/4분기에 이르기까지 퇴직자들의 퇴직 원인을 고용보험 DB를 통해 분석한 결과(p. 89 표 2)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자발적 사유(폐업/도산/공사 중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로 인해 퇴직한 인원은 총 2만 9,047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단순히 연 단위로 환산하면 3만 8,729명이 된다.

2016년 한 해 동안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위기 발생에 대한 대응책 마련 목소리가 한창 높았던 점을 감안해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연간 4만 3,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지 짐작할 수 있다. 하물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연간 32만 6,000명이 넘는 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 관련 산업 부문에서 쏟아져 나올 경우,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상상 이상의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고용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그 지속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우선 요구된다. 아래에 제시될 단기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실직의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100% 담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정부 대표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논의하고 있듯, 자유무역의 이익이 교역 국가 간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 간에 공유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에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이 각국 경제 및 세계 경제 전체의 안정적 장기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임을 재확인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조만간 임기를 시작할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주된 원인이, 미국의 대외경쟁력 상실로 인해 쇠락한 미국 내 제조업 중심 지역에 거주하면서 국제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는 백인 노동자계급에 호소하기 위해서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 백인 노동자계급의 불만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Acemoglu, Daron, Autor, Dorn, Hanson, and Price(2016)는 미국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중국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미국 제조업 부문 고용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약화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 Autor, Dorn, and Hanson(2016)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기존의 교과서적 설명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중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지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 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어렵지 않게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으로 이동하여 고용총량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교과서적 예측과는 달리, 중국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부문에서의 고용 감소는 빨리 일어나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의 고용 확대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Autor et al.(2016)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어떻게 향유되는지에 대한 고민, 특히 비교우위를 잃은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려를 줌

더 진지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Autor et al.(2016)은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이루어진 해외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단순히 교과서적으로 자유무역의 이익을 강조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미국 내에서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예 자유무역 기조를 폐기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것보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순수하게 경제정책 차원에서 자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 데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 마련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외교안보 관련 사안과 경제정책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함을 꾸준히 강조해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는 현재 확산 기로에 서 있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되돌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만 설령 이른 시일 내에 양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멈출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 몇 년간은 그 파급효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할 노동시장에서의 충격파를 어떻게 최대한 완화시킬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대책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직종별 및 근로자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산직중에 종사하는 고졸 이하 남성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의 특성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대책을 참조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다.

노동시장에서의 충격파 완화를 위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보

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퇴직자들에 대해 기존의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김강호(2016)가 제시한 조선산업 근로자 및 퇴직자 83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지원 서비스 중에서도 재취업 알선이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전직준비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이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p.92 표 6) 이러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김강호(2016)는 산업별 퇴직자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 퇴직자의 연령 및 가구특성을 감안한 서비스 차별화, 프로그램 구성 개선 및 일자리 정보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울산, 거제, 목포, 창원 등 조선산업이 밀집된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가 개소되어 퇴직자 대상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여파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부문이 나타날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산업 밀집 지역에 전직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희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김강호(2016)가 지적하듯 조선업 희망센터의 경우 홍보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조선업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수의 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 전직지원 서비스가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해도 현실적으로 Autor et al.(2016)이 지적하듯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이 매우 더디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외에 추가적인 전직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배규식(2016)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에 있어 산업별 노사가 공동으로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여기에 정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하였다.(p.120) 배규식(2016, pp.120-121)이 밝히고 있듯 유사한 해외 사례는 유럽세계화구조조정기금인데, 그 목적은 세계화 혹은 경제위기로 실직한 이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배규식(2016)이 제안한 방안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산업별 기금 설치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기 충격에 대한 대응방안에 있어 국내외 사례로 제시된 조선업 희망센터나 유럽세계화구조조정기금 등의 경우, 주된 수혜대상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 생산직중 고졸 이하 남성 근로자들의 대규모 퇴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벤치 마크하는 데 적절한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내외 사례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에 맞닥뜨렸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 참조해야 할 것이다.

제3절 맺음말

2016년 12월 현재 우리 경제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관계로 수출 확대가 여의치 않고, 여기에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까지 심화되어 여러 모로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조만간 임기를 시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중 공약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가시화되고, 중국 스스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강화되어 간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

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 및 근로자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 방법론과 방대한 미시자료 활용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우리가 조만간 직면할 문제가 쉽사리 극복을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지 않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를 비롯하여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뤘던 여러 나라들이 합심하여 설득 작업에 나설 경우, 전통적으로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설계 및 실행에 있어 선도자 역할을 해 온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멈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점이다.

앞 절에서 소개된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Acemoglu et al., 2016; Autor et al., 2016)에서 보듯, 자유무역으로 인해 단순히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고용상의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자체를 포기하기 보다는, 자유무역을 유지해나가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자국의 이익에 부합함을 꾸준히 설득한다면, 미국으로부터는 아주 머지않은 기간 내에 보호무역주의 철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외교안보 분야의 양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의외로 오랜 기간 동안 대중국 수출의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분야 사안과 경제정책을 철저히 분리하는 게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함을 꾸준히 강조해 나가는 것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지속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되, 그 짧은 기간이 개별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매우 긴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기존의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 전직지원 서비스에 더해 새로운 방식의 전직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짧으며 지급액도 적은 점을 감안하고, 여러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그나마 실직자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는 길이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네트워크 확대 과정에서 이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뤄온 우리에게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분명히 큰 도전이다. 단순히 향후 수 년간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경제성장률이 기존 경로보다 덜 상승하는 차원을 넘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수의 근로자들에게 실직이라는 큰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향후 최소 몇 년간 지속될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감으로써, 바라건대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시스템이 복원될 때 그 과실을 향유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5년 원자료.
-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김강호(2016), 「조선산업 구조적 위기 대응방안: 전직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고용 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김인준(1998), 『국제경제론』 제3판, 다산출판사.
- 김정호(2016),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한국노동경제학회 발표 논문.
- 배규식(2016), 「조선산업의 구조적 위기 대응방안: 정책적 제언」,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고용 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ISTANS.
- 조선일보, 「대놓고 압박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 2016년 12월 3일자 기사.
- 최남석(2016),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KOTRA(2016),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Global Market Report 16-025.
- 한국은행(2015), 『2013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20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시스템.
- 현대경제연구원(2016), 「미중의 대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 714호.
- Acemoglu, Daron, David Autor, David Dorn, Gordon H. Hanson, and Brendan Price(2016), “Import Competition and the Great US Employment Sag of the 200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1, pt. 2), pp.S141-S198.

- Autor, David, David Dorn, and Gordon H. Hanson(2016), “The China Shock : Learning from Labor-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pp. 205–240.
- Johnson, Harry G.(1965), “An Economic Theory of Protectionism, Tariff Bargaining, and the Formation of Customs Un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3(3), pp.256–283.
- Lee, Jong-Wha and Phillip Swagel(1997), “Trade Barriers and Trade Flows across Countries and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9(3), pp.372–382.
- UN Comtrade Database.

◆ 執筆者

- 김세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전망

- | | |
|-----------|---|
| ▪ 발행연월일 | 2016년 12월 24일 인쇄
2016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방 하 남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16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113-2